농촌계획
vol. 19, no. 1, 2013 (123-135) http://dx.doi.org/10.7851/ksrp.2013.19.1.123

농촌지역 산업별 고용변화요인 분석
- 충남 5개 군을 대상으로 -

김 정 태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

Analysis of Industry-dependent Employment Change Factors in Rural Areas: Targeting 5 Counties in Chungnam

Kim, Jung Ta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dustry-wise employment growth factors in rural areas. Regional economic vitalization is sensitive to internal and external interaction changes among various industrial and occupational sectors. Thus, rural regional economic vitalization requires a comprehensive approach in analyzing industry-dependent employment structures and growth factors in rural areas. However, research conducted thus far has mostly focused on agriculture and farmers. Considering the evidence that rural communities continue to be stagnant and 80% of the rural population is engaged in nonagricultural activities, it becomes necessary to review industry-specific employment change factors in rural areas. This study targeted 5 counties in Chungnam. The results revealed that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ccupied the foremost positions with regard to population employed and regional GRDP share. The influence of national growth on employment and business variation effects was as high as 98.1% and 78.6%, respectively, thus demonstrating the high likelihood of rural economy to be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Growth in the public sector appeared to support employment structure. Moreover,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es, constituting 14.4% of employment in rural areas, showed a strong trend toward degeneration, to the extent that difficulties have been forecasted for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essential for basic livelihood of the rural residents.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above observations need to be considered for policy-making to ensure that industrial structure is modified on the basis of internal demand of the region,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es is integrated in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s.

Key words : Employment in rural, Industry, Shift-share,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es.

I. 서 론

최대의 복지는 고용이라는 말이 있듯 고용은 인간의 생존수단인 동시에 자아실현을 제공하는 기회이다. 고용은 개인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타인에게 유용한 삶의 재화를 공급하는 수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요인이다. 농촌정책의 중요한 과제는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주된 시각은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인 직접보조와 같은 농업, 농업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고용에 대한 관심은 덜한 듯하다.

농촌지역에서 농업은 수위산업의 지위와 단일종사 인력 규모에서 가장 큰 산업으로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이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는 수출기반이론에 근거할 때 타당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 내에 위치한 다양한 산업과 직업군이 얽혀 내외부의 변화에 반응하는 것으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위치한 산업과 고용구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Corresponding author : Kim, Jung Tae
Tel : 031-420-3448
E-mail : kimjungtae@paran.com

특히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농촌에서 비농업부문과 관련하여 생계를 잇는 인구는 약 63.8%에 달하고 농가 중 겸업농가 비중은 46.7%이며 비농업부문에 대한 참여가 많을수록 농가소득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통계청a, 2010),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가유지를 위해서도 농업 외 다른 산업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농촌에 대한 대도시권 영향력 확대로 도시적 성격을 갖는 점이지대 및 농촌에서 도시로의 출·퇴근자 증가 등 농업 외 활동이 농촌지역에서 증가되는 현실과 농촌지역 청장년층의 유출을 막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농촌지역의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따라서 농촌과 농업유지를 위한 접근은 우선 농촌지역 내 고용구조 실태를 명확히 하는 작업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고용측면에서 농촌지역의 산업별 고용수준과 성장요인 규명을 통해 농촌지역 고용과 관련한 기초자료 제공과 함께 지역개발 측면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은 농촌지역 고용에 대한 시각과 관련연구를 살펴보고, 3장은 농촌지역 고용의 성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며, 4장은 연구결론으로 본 연구가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갖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농촌지역 고용에 대한 시각과 관련연구

1. 농촌지역 고용에 대한 시각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관을 통한 지역 내 다양한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이를 제외한 연구는 지역개발 관점을 받아들여 지역 내 장소성에 기초한 지역특화 방안으로 국제행사 유치(이정석, 2012; 최창호, 2012; 변상규, 2012; 김상태 등, 2012) 및 관광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거나(문지효와 송운강, 2012; 우재영, 2012), 구도심의 재생과 활용의 관점에서 논의된다(이홍과 안병진, 2012). 이들 논의의 공통적인 전제는 지역 내 한 부문의 성장이 산업간 전후방 효과를 통해 다른 부문의 성장에 영향을 미쳐 지역 내 고용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그 마저 주된 연구초점은 첫째 WTO · FTA 등의 대외적 환경과 농업인 고령화 등 내부적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 차원에서의 접근(김태이 등, 2012, 이동소 등, 2012, , 최경희와 조덕호, 2010, 고성보, 2008), 둘째 농촌지역 내 위치한 자원의 산업화 추진을 위한 정책화를 위한 실증연구(김영주 등, 2012, 조은정 등, 2011), 셋째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어메니티 요소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기회 창출방향에 논의가 집중된다(박진욱과 엄붕훈, 2012, 권오옥과 김천성, 2012, 김영택 등, 2011). 이와 같은 연구경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일반 연구들과 다른 점은 수위산업으로서 농업과 그에 따른 고용효과에 대한 논의는 찾기 어려우며 지역개발 관점에서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장소성 특화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는데 이들 논의의 공통점은 주로 농업과 농업인을 중심에 두고 접근한다.

전통적 지역개발이론인 수출기반이론 관점에서 볼 때, 농촌지역의 기반산업인 농업부문 성장은 이를 지원하는 지역 내 다양한 산업 활동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그렇지만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업 생산액 비중이 2002년 3.7%(33,435 십억원)에서 2011년 2.4%(43,214 십억원)로 감소하고 대다수 농업인의 주작목인 쌀이 농림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28.6%에서 18.5%로 축소되며 농가소득 중 농업의존도는 46.1%에서 29.0%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인다(통계청b, 2012).

또한 2010년 전국 농가 수는 1,177천명인데(통계청b, 2012) 겸업농가 비중이 46.7%에 이르고(통계청a, 2010),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읍·면 인구는 8,627천명이나(통계청c, 2010), 농가 인구는 3,063천명으로(통계청b, 2012), 농촌에서 비농업부문과 관련하여 생계를 잇는 농촌주민은 전체의 약 63.8%를 차지하며 겸업농 비중을 고려하면, 농촌인구의 약 80% 정도가 농업 외 부문과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업농 소득은 22,677천원인데 반해 1종 겸업농은 33,379

Table 1 2010년 전업 및 겸업농 비율

(단위 : %)

농가 수	전업 농가	겸업 농가	1종 겸업농가				2종 겸업농가			
			전체	경영주	가구원	경영주와 가구원	전체	경영주	가구원	경영주와 가구원
1,177,318	53.30	46.70	16.43	4.31	6.30	5.82	30.27	7.91	9.90	12.47

자료 : 농림어업 총조사(통계청a, 2010)

천원, 2종 겸업농은 39,328천원으로(통계청 보도자료, 2012년 4.30일자) 농업 외 다른 산업부문과의 관련이 높을수록 농가소득이 높은 현실을 볼 때 농업이 농촌지역에서 수위산업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시된다. 더욱이 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령화가 한층 더 가속화 되는 현실에서 농촌지역 내부수요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농가유지를 위해서도 농업외 다른 산업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중시하는 경향은 농촌이 도시보다 다른 산업부문의 활동을 촉진할 기반시설이 부족하며 이로 인한 기업입지 조건의 불리함 등으로 인해 지역 내 기반산업부문인 농업과 농업인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지역개발 정책 중 노동의 지역 간 이동을 억제하는 정책이 시행된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역성장은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동태적 이동의 결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노동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관점은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정책이 사용된다(김홍배, 2005). 이동을 촉진시키는 정책은 이동보조금 등을 통해 낙후지역 내 과잉인력을 성장지역으로 유도하여 낙후지역과 성장지역 내 완전고용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억제정책은 낙후지역 내 주민에게 다양한 형태의 소득보조를 제공하여 노동력을 풍부히 하고, 이에 유인된 자본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국토계획을 살펴보면(국토연구원, 1999) 1970년대까지 성장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에서 농촌인구를 대상으로 이동을 촉진시키는 지역거점정책이 사용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도시로의 과도한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불경제 해소를 위해 지역생활권 등 균형개발정책이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농촌인구에 대한 정책은 이동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억제정책에 사용되는 주요한 정책적 수단은 주민을 지역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한 보조금인데, 1980년대 이후 대다수 농업정책이 보조금으로 전환되어온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증거 한다. 이러한 국토계획 및 농업정책과 함께 농업의 대외적 개방을 통한 농가소득감소, 농업인력 노령화 등은 식량안보와 사회복지 차원과 결부되어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보조와 지원을 강화시키게 된 계기이다.

농작업이 갖는 성격도 농촌지역 고용에 대한 관심을 덜하게 한 요인이다. 농업은 '문전옥답'의 말에서 보여지듯 직주일치 산업으로 일상생활과 직업으로서 농업활동과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다. 좁은 의미의 실업은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실업은 일하고자 하나 일자리가 없는 비자발적 실업을 의미한다. 농업에서 발생하는 실업은 은퇴 농, 혹은 농업을 포기하고 다른 산업부문 및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발생되는데, 은퇴 농의 경우 다수가 경제활동인구에서 벗어난 65세 이상이며, 다른 산업부문에 종사하기 위해 농업을 포기하는 경우 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농촌은 단일 업종에서 농업종사인력이 다수를 차지하는 농업중심 고용구조가 형성되어 농촌 내 다른 산업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은 많지 않으며, 지역경제 분석에 활용되는 통계자료 대다수가 시·군 단위로 생성되어 있어 농촌지역인 읍·면을 대상으로 한 자료 확보가 쉽지 않으며, 고용과 직접관련되어 실업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국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이루어져, 시·군·구의 소지역 단위 고용통계가 나오지 않는다(경남고용포럼, 2007).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별 고용구조 등 산업별 현황을 살피는 주된 방법론인 산업연관분석은 생산유발승수, 부가가치승수, 감응도 계수 등 다양한 수치로 측정되어 다양한 측면을 살필 수 있지만, 모든 산업에 대한 세부정보를 필요로 하는 등 자료요구도가 높아 농촌지역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농업'으로 등치시키는 인식이 강해 농촌 내 위치한 산업과 이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과 문제들은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측면에서 고용에 대한 관심을 더디게 만들었으며 농업과 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업생산성과 농업 외 소득 증가에 초점을 맞추게 된 주요원인이다. 농촌은 농업인만의 공간이 아니며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농촌주민이 삶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지역으로서 농촌을 생각한다면 농업이 아닌 다른 부문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농촌주민이며,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농촌 지역 내 위치한 다양한 산업부문의 고용변화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유지를 위해 비농업부문을 포함한 지원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농촌지역 내 각 산업부문별 고용구조의 변화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 농촌지역 고용관련 연구

고용과 관련된 연구는 직업이 주는 사회적 의미를 바탕으로 현 경제상황에서 고용 없는 성장(유영명 등, 2012, 김배근, 2012), 고용평등의 관점(홍정화, 2012, 이호

근, 2011, 주상현 등, 2006)에서 논의된다. 통상 노동수요는 실물시장으로부터 유발된 파생시장으로 고용 없는 성장은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인 노동수요가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현실에 주목한다. 기술진보에 따른 업무지원 기술의 발전, 단순노동에서 질적 노동으로의 변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고용수요 감소문제점과 대안으로 관광산업 등 대면접촉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 성장을 통한 고용유발을 주로 제시한다. 고용평등 관점은 주로 여성, 노령인,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고용시장 참여가 갖는 의의와 지원방향을 설정하는 논의를 중심으로 주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다룬다. 농촌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고용평등 관점에서 노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 외국인 농업연수생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산업부문별 논의는 부족하다.

농촌지역 고용과 관련한 연구는 이성우 등(2003a, 2003b)의 농촌과 도시의 고용기회 차이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들은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의 고용기회 차이를 대상자의 개인적 배경과 지역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하는데, 농촌지역 고용문제는 도시보다 낮은 농촌지역 인적자원의 개인적 차원으로 귀결된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농촌인구의 도시유출이 지속되고, 고급인력 취업기회가 도시에 주로 형성되어 농촌지역 내 고급인력의 도시유출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농촌지역 인구의 개인적 문제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논의가 앞서야 한다.

박영구와 이승렬(2006: 91)은 고용기회를 중심으로 농촌지역 고용구조를 농촌지역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취업인구 감소로 기업유치가 저하되어 고용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농촌지역 내 다양한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개선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 연구는 분석변수로서 종사자수, 학력수준, 주민세, 사업체수 등을 활용하여 대상지역 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은 알 수 있으나, 농촌지역 내 고용구조가 산업별로 어떠한 변동을 겪고 있는가는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 내 위치한 다양한 산업부문이 얽혀 대내외적 변화에 반응하는 것으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농촌지역 내 위치한 산업부문별 고용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지역 내 위치한 각 산업부문별 고용구조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종합적 시각에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접근하고자 한다.

III. 실증분석

1. 분석방법 및 자료

농촌지역 고용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산업별 고용인력 및 사업체 수를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이할당 분석은 통계자료 확보가 용이치 않은 지역의 성장원인 규명에 적합한 방법으로 통계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읍·면 지역 등의 소규모 지역의 경제 분석과 예측에 적합한 방식이다. Curtis(1972)는 4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수입과 고용부문 변화를 분석하고, 농촌개발연구에서 기술적 도구로서 활용가치가 높음을 제시하였고, Halperin과 Mabry(1984)는 지역과학 분야에서 변이할당분석은 단순하면서도 결과해석이 용이하여 소지역의 다양한 지역성장 문제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기법으로 평가한다. 김홍배와 김현주(2001)은 기초행정구역의 지역 단위가 지역간 생산기술과 생산환경의 차이를 좀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 군 또는 시와 같은 단위에 적합한 기법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의 경제상황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변이할당분석은 지역의 고용분석에서 출발하여(박이택, 2012), 주로 산업별 성장요인과 고용자수의 성장요인을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되나(이정록, 2000, 정순관, 2006, 최재용과 송태수, 2012),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 요인(이상학과 김정숙, 2010), 총요소생산성 분석(유형명 등, 2011), 의료산업 클러스터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고용자수 변화요인을 분석하는 등(김홍식 외, 2009) 현재는 다양한 부문으로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적용에 있어 성장률을 사용할 수도 있고, 성장한 규모(증가분)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결과는 질적으로 동일하며 성장률이 정규화된 척도이므로 해석상 용이할 뿐만 아니라, 성장에 대한 지표로 GDP(또는 GRDP), 사업체수, 매출액, 고용자수 등이 다양하게 가능하다(서성원 등, 2012).

즉 변이할당분석은 지역성장분석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이 분석은 지역의 성장과정분석 뿐만 아니라 그 영향요인의 구체적 파악을 통해 지역의 성장예측모형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김상호, 2000), 산업재조정, 산업정책의 목표설정, 주요 핵심 산업의 선정 및 육성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특히 국가경제의 성장, 지역경제의 성장, 산업구조효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분석에 유용하다(유영명 등, 2010). 그러나 예측모형으로서의 변이할당모형의 한계는 일정할당과 일정변이의 가정에 있다. 이러한 가정은 지역의 동질성과 여건변화에 따른 지역 환경변화를 나타내는데 기본적으로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이할당분석의 기본적 전제는 각 지역은 자연환경, 지리적, 입지적 특성, 기발달한 산업 구조적 특성 등에 의하여 전국 혹은 다른 지역과 상이한 산업성장 구조를 갖기에, 동일한 산업이라도 변화의 속도가 다른 지역과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이러한 가정은 제약적이지 않다(서성원 등, 2012).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변이할당분석은 특정지역의 성장을 분해하여 파악하는 성장회계 방식에 기인하는데(김홍배와 김현주, 2010), 지역경제 성장구조를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한다. 외부요인은 국가성장에 따른 효과로 국가 전체의 총량적인 수요증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내부요인은 지역산업 구조요인과 지역경쟁 요인으로 구분한다. 지역산업 구조요인은 지역경제 성장을 지역 내 산업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갖는 위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 내부 산업이 지역 외부수요를 충족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핀다. 지역경쟁 요인은 지역산업 성장이 지역 위치, 자원 같은 자연자원과 도로 등의 생산 환경을 돕는 인위적 환경조건을 의미한다. 분석에 사용된 방법을 설명하면 식(1)과 같은 방식으로 지역의 부문별 성장률을 구한다.

$$g_{i,t}^{r} = \frac{E_{i,t}^{r} - E_{t,t-1}^{r}}{E_{i,t-1}^{r}},$$

$$g_{i,t}^{n} = \frac{E_{i,t}^{n} - E_{t,t-1}^{n}}{E_{i,t-1}^{n}},$$

$$g_{t}^{n} = \frac{E_{t}^{n} - E_{t-1}^{n}}{E_{t-1}^{n}} \quad \text{---------- (1)}$$

$g_{i,t}^{r}$: 지역 r 내 산업 n의 성장률

$g_{i,t}^{n}$: 전국에서 산업 i의 성장률

g_{t}^{n} : 전국 경제성장율

변이할당분석에서 지역 산업의 성장률을 요인별로 구분하는 과정은 지역산업의 성장률을 중심으로 전국산업 성장률과 전국 경제성장률을 가감하면, 식(2)와 같은 항등식의 구조를 갖는데, 이는 다시 식(3)을 통해 성장요인으로 구분된다.

$$g_{i,t}^{r} = g_{i,t}^{r} + (g_{t}^{n} - g_{t}^{n}) + (g_{i,t}^{r} - g_{i,t}^{r})$$
---------- (2)

$$g_{i,t}^{r} = g_{t}^{n} + (g_{i,t}^{n} - g_{t}^{n}) + (g_{i,t}^{r} - g_{i,t}^{n})$$
---------- (3)

$$g_{i,t}^{r} = g_{t}^{n} + g_{i,t}^{r,id} + g_{i,t}^{r,com}$$
---------- (4)

$g_{i,t}^{r,id}$: $g_{i,t}^{n} - g_{t}^{n}$: 지역 산업성장

$g_{i,t}^{r,com}$: $g_{i,t}^{r} - g_{i,t}^{n}$: 지역 경쟁요인

지역의 산업별 고용자 수를 식(5)와 식(6)에 적용하여 산업부문별 성장요인에 따른 고용자수 변화를 구할 수 있다.

$$g_{i,t}^{r} E_{i,t-1}^{r} = g_{i,t}^{r} E_{i,t-1}^{r} + (g_{i,t}^{n} - g_{t}^{n}) E_{i,t-1}^{r} + (g_{i,t}^{r} - g_{i,t}^{n}) E_{i,t-1}^{r}$$
---------- (5)

$$\Delta E_{i,t}^{r} = E_{i,t}^{r} - E_{i,t-1}^{r} = \Delta E_{t}^{n} + \Delta E_{i,t}^{r,id} + \Delta E_{i,t}^{r,com}$$
---------- (6)

$E_{i,t-1}^{r}$: 지역의 산업별 고용자(사업체) 수

그런데 변이할당모형은 연구기준시점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동일한 지역 및 경제상황에서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시점기간 동안의 지역경제 추세비교를 확인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자가 적용하였다(김학훈, 2011, 유영명 등, 2007, 변필성 등, 2005).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사업체기초 통계조사자료(2007년, 2010년)를 이용하여 4년간 고용인구, 사업체 변화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시점을 2007년으로 한정한 이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2007년 개정되어 이전 조사시점과 분류기준 및 조사지침이 상이하여 산업 활동별 분류가 이전시점과 다르기 때문이다. 산업별 GRDP액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시군별 GRDP 자료 중 2005년 기준가격을 이용하였고, 2010년도는 제공치 않아 2009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 외 분석에 활용한 통계자료는 대상지역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통계연보자료를 이용하였다.

2. 연구대상지 개괄

대상지는 충청남도 부여군(1읍 16면), 서천군(2읍 11면), 청양군(1읍 9면), 홍성군(2읍 9면), 예산군(2읍 10면) 5개 군으로 총 8개 읍, 55개 면이다. 충청남도는 최근

수도권의 공업단지가 아산, 당진, 서산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세종시 및 충남도청 이전 등의 요인으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외부요인에 의한 국내 농촌 변화 상태를 살펴보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농촌을 읍·면으로 볼 때, 도농복합시 등 해당 행정구역 내 시(市)가 포함될 경우 동일 분석자료 내 시(市)지역이 미치는 영향이 강해 농촌지역 변화를 살피는데 제약이 있어, 도농복합도시 등 행정구역상 시로 분류되는 8개 지역을 제외하였다. 군 지역 중 제외된 지역은 금산군과 태안군이다. 금산군은 대전광역시와 인접되어 대도시의 영향권 아래 있으며, 태안군은 2011년 기준으로 어가인구가 10,498명으로 농가인구대비 16.4%가 넘어 어촌을 포함하는 농촌지역 평균인구의 11.9%보다 높으며(민흥기, 2009), 2011년 기준으로 어가소득이 농가소득보다 128%가 높아 농촌지역의 상황으로 일반화시키는데 제약이 있어 제외하였다.

우선 5개 군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평균 노령화 지수는 205.2로 2007년 이후 37.8이 상승하였다. 2011년 전국 노령화 지수가 72.8임을 감안할 때(통계청, 2012), 대상지역 노령화 수준은 이 보다 약 3배가 높다. 전체인구, 경제활동인구, 농가 수, 농가인구는 모두 '07년에 비해 각 -2.3%, -2.1%, -6.3%, -9.1%가 감소하는 반면

Table 2 연구대상지역 농가인구와 사업체 종사자 현황

	부여군		청양군		서천군		예산군		홍성군		전체	
	2007	2010	2007	2010	2007	2010	2007	2010	2007	2010	2007	2010
전체 인구	77,916	75,029	33,604	32,541	61,168	60,085	88,670	87,002	89,539	88,078	350,897	342,735
경제활동인구	49,232	47,407	20,507	19,821	38,347	37,574	58,307	57,238	58,205	57,876	224,589	219,916
농가 수	11,363	10,905	7,061	6,427	8,168	7,136	12,127	11,118	11,108	11,082	49,827	46,668
농가 인구	29,604	27,798	17,520	15,694	20,065	17,225	32,436	28,280	29,425	28,274	129,050	117,271
사업체종사자	17,303	18,780	7,825	8,266	16,270	17,960	22,810	22,321	23,062	25,707	87,270	93,034
노령화지수	171.8	215.3	219.4	264.9	178.0	217.9	149.4	180.2	118.6	147.6	167.4	205.2

주) 청양군 2007년 사업체 종사자수는 2006년 자료. 예산군 2007 농가인구는 2005년, 2010년 사업체종사자수는 2009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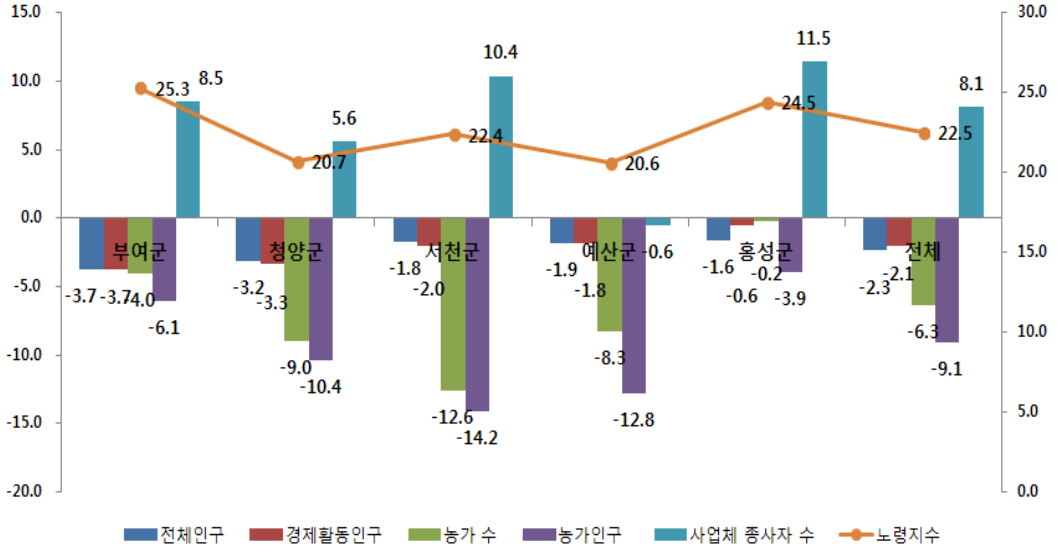

Figure 1 2007년 대비 2010년 연구대상지역의 변화상태.

사업체 종사자 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27.1%로서 2007년에 비해 8.1%가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5개 군은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보다 빠르게 농업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농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부문의 고용이 점차로 5개 군에서 증가하여, 향후 5개 군의 중심고용구조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홍성군과 서천군은 사업체 종사인력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농가인구 감소는 서천군과 예산군이 다른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5개 군의 산업별 GRDP 비중은 농림어업 전국비중이 3.29%인데 5개 군에서는 23.58%로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이며 <Table-2>의 농가 수와 농가인구를 고려하면 5개 군에서 농림어업은 기반산업의 지위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17개 산업별 활동 중 전국에서 2007년에 비해 생산액이 감소한 부문은 [광업], [건설업], [운수업] 3개 업종인데, 5개 군에서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등 9개 부문의 생산액 감소를 보여 전국에 비해 5개 군의 지역경제 위축이 심한 것으로 보이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비중은 전국에 비해 2배가량 많은 12.73%로 5개 군에서 공공부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3. 분석결과

가. 산업부문 사업체별 평균 고용인력

2010년 기준 전국 사업체 수는 3,355,470개, 고용 인력은 17,647,028명이며, 5개 군은 각 23,595개, 96,920명이다. 2010년 기준으로 5개 군 사업체 수 비중은 [도매 및 소매업] 28.37%, [숙박 및 음식점업] 20.81%, [협회 ·단체 수리 등] 13.81%의 순으로 사업체 수 비중 순위는 전국과 동일하였으나, 동 업종이 5개 군에서 차지하는 정도는 전국보다 다소 높았으며, 고용자수 비중은 제조업 18.74%, 도매 및 소매업 14.64%, 숙박 및 음식점업 11.36%의 순이었다.

2010년 현재 산업부문별 평균 종사인력 규모를 보면 [광업], [교육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전국보다 규모가 작다. 5개 군에서 [광업]의 평균 종사규모는 전국의 약 2배로 대표적인 원료입지산업인 광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청양, 예산 등에 광산업이 위치한 결과이다. [교육 서비스업]은 8.9명으로 전국보다 0.3명이 많았으나, 그동안 진행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폐교 등으로 인한 학교 수 감소와 이 부문에 속한 고용자의 신분적 특성이 교육공무원으로 고용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 등의 악화된 농촌지역 교육현실로 판단된다.

이들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농촌지역에 위치한 사업체 규모가 전국보다 작다는 점은 경기변동 등 외부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전국수준에 비해 취약하여, 고용측면에서 지역내부 요인보다 국가성장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전문, 과학 등]은 도시에 비해 약 1/3 수준에 불과하여 지역 내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전문과학 기술 등이 열악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행정, 국방 등] 부문의 고용비중이 전국평균 보다 약 2배가량 많은 8.01%로 2007년에서 2010년의 4년간 고용비중 변화가 전국 0.25%보다 2배 높은 0.50%으로 비교적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의 사업체 비중은 전국보다 낮지만, 동 기간 사업체 및 고용자수 증가가 각 0.51%, 1.98%로 전국 0.49%, 1.09% 보다 높다. 이러한 변화는 5개 군의 고용부문에서 공공부문이 빠르게 증가하며, 노령화 심화에 따른 의료 및 각종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 보인다. 반면 [농림, 임업 및 어업]은 사업체 및 종사인력 비중이 각 0.43%, 1.04%로 전국보다 약 6배가 높은데, 이 부문에 속하는 세부업종은 재배업 등 농산물 등의 생산과 관련된 사업체로 5개 군의 기반산업이 농림어업인 농촌지역인 지역적 특성의 결과이다.

나. 산업부문별 고용 및 사업체 수 변화요인 분석

2007년에서 2010년 간 산업 활동에 따른 전국 고용성장률은 10.7%, 5개 군 성장률은 10.5%로 5개 군의 고용성장률은 전국보다 낮으며, 국가성장에 기인한 효과가 5개 군 고용성장원인의 98.1%를 차지한다. 5개 군의 고용부문 성장 중 내부효과는 －0.2%로 위축되고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산업구조 요인에 의한 성장률은 －0.8%, 지역경쟁요인은 0.6%로 산업구조 요인이 5개 군의 고용성장을 저해하고 있었다. 이는 5개 군에 위치한 산업이 지역 지역외부 수요를 이끌 수 있는 산업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내부요인 효과 중 지역경쟁 요인에 의한 고용자수 변화를 보면, 고용자수가 증가한 부문은 [제조업] 859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705명, [사업시설 관리 등] 563명, [운수업] 437명, [예술, 스포츠 등] 167명 등의 순으로, 5개 군에서도 [제조업]은 고용성장의 핵심이었다. 지역 내 산업구조 요인에 의한 고용성장은 [건설업] 1,292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1,210명, [공공행정, 국방 등] 508명, [전문, 과학 등] 159명, [사업시설관리 등] 158명의 순인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사업시설관리 등]은 전국보다 각 0.138, 0.539가 높으며, 동 부문은 지역경쟁요인도 양적효과를 보여 5개 군 지역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Table 3 전국과 5개 군의 산업별 GRDP 현황

(단위 : 백만원)

경제활동별	전국			5개 군		
	2009년 생산액	2009년 비중	2007년 대비 증가액	2009년 생산액	2010년 비중	2007년 대비 증가액
총부가가치(기초가격)	900,826,041	100.00	34,900,383	5,873,222	100.00	212,413
농림어업	29,655,686	3.29	3,251,634	1,384,962	23.58	69,096
광업	1,884,808	0.21	-59,322	57,253	0.97	25,743
제조업	256,072,797	28.43	7,382,041	1,217,504	20.73	31,202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21,193,897	2.35	2,159,812	101,851	1.73	-5,098
건설업	61,717,265	6.85	-1,106,552	431,192	7.34	94,462
도매및소매업	78,466,254	8.71	698,483	229,167	3.90	-51,279
운수업	39,155,897	4.35	-560,750	189,010	3.22	-11,816
숙박및음식점업	19,673,236	2.18	49,535	95,223	1.62	-21,068
정보및통신업	41,914,571	4.65	3,013,732	95,481	1.63	-3,072
금융및보험업	67,743,033	7.52	5,760,689	227,775	3.88	-27,028
부동산업및임대업	68,057,980	7.56	1,665,350	340,536	5.80	-4,606
사업서비스업	42,452,764	4.71	1,439,486	77,973	1.33	12,347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56,674,875	6.29	2,693,578	747,507	12.73	21,394
교육서비스업	52,496,913	5.83	1,710,402	380,555	6.48	124,50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2,113,102	3.56	5,179,319	154,957	2.64	-11,382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1,541,266	1.28	902,027	45,909	0.78	7,422
기타서비스업	20,011,697	2.22	720,919	96,370	1.64	-38,404

Table 4 전국과 5개 군의 산업부문별 사업체 및 종사인력 비중

(단위 : %/명)

경제활동별	전국(사업체)		전국(종사인력)		5개군(사업체)		5개군(종사인력)		전국(평균)		5개군(평균)	
	2007	2010	2007	2010	2007	2010	2007	2010	2007	2010	2007	2010
1.농업, 임업 및 어업	0.07	0.07	0.21	0.17	0.45	0.43	1.97	1.04	14.9	12.9	16.3	10.0
2.광업	0.05	0.05	0.11	0.09	0.09	0.05	0.29	0.22	10.0	9.3	12.0	17.8
3.제조업	10.19	9.74	20.92	19.37	8.66	8.28	19.25	18.74	10.0	10.5	8.3	9.3
4.전기, 가스 등	0.05	0.04	0.43	0.38	0.09	0.08	0.77	0.66	43.8	44.2	30.7	33.6
5.하수폐기물 처리 등	0.15	0.16	0.39	0.39	0.24	0.28	0.62	0.79	12.5	12.8	9.6	11.6
6.건설업	2.88	2.89	5.36	6.69	3.23	3.39	5.37	6.44	9.1	12.2	6.2	7.8
7.도매 및 소매업	26.60	26.13	15.78	14.83	29.01	28.37	16.01	14.64	2.9	3.0	2.1	2.1
8.운수업	10.38	10.35	5.53	5.62	7.76	7.93	4.16	4.69	2.6	2.9	2.0	2.4
9.숙박 및 음식점업	19.10	18.91	10.77	10.01	21.13	20.81	12.77	11.36	2.8	2.8	2.3	2.2
10.출판영상 등	0.75	0.79	2.60	2.66	0.46	0.46	1.13	1.06	17.0	17.8	9.1	9.5
11.금융 및 보험업	1.13	1.17	4.00	4.01	1.24	1.30	3.73	3.79	17.3	18.0	11.3	12.0
12.부동산업 및 임대업	3.81	3.76	2.68	2.50	2.13	2.50	1.18	1.33	3.4	3.5	2.1	2.2
13.전문, 과학 등	1.96	2.10	3.74	4.25	1.14	1.23	1.20	1.18	9.4	10.6	3.9	3.9
14.사업시설관리 등	0.92	1.07	3.93	4.47	0.68	0.82	1.19	1.94	20.8	22.0	6.6	9.7
15.공공행정, 국방 등	0.38	0.36	3.51	3.76	1.16	0.97	7.51	8.01	45.6	55.6	24.2	33.9
16.교육 서비스업	4.77	4.95	8.11	8.05	4.05	3.96	8.86	8.62	8.3	8.6	8.2	8.9
17.보건업 및 사회복지	2.70	3.19	5.06	6.15	2.66	3.17	5.80	7.78	9.1	10.1	8.1	10.1
18.예술, 스포츠 등	3.09	3.07	1.91	1.83	2.03	2.17	1.26	1.39	3.0	3.1	2.3	2.6
19.협회·단체, 개인서비스업 등	11.02	11.21	4.95	4.77	13.80	13.81	6.92	6.33	2.2	2.2	1.9	1.9
계	3,262,925	3,355,470	15,943,674	17,647,028	23,476	23,595	87,707	96,920	12.9	13.8	8.8	10.1

Table 5 산업부문별 고용인력 변화

경제활동별	국가성장 효과	지역 성장	국가 성장	산업구조 요인	산업구조 효과	지역경쟁 요인	지역경 쟁효과	전체
1.농업, 임업 및 어업	184	-0.417	-0.096	-0.203	-350	-0.320	-553	-719
2.광업	27	-0.158	-0.078	-0.185	-47	-0.080	-20	-40
3.제조업	1,804	0.076	0.025	-0.082	-1,385	0.051	859	1,278
4.전기, 가스 등	72	-0.053	-0.034	-0.141	-95	-0.019	-13	-36
5.하수폐기물 처리 등	58	0.401	0.116	0.009	5	0.285	156	219
6.건설업	503	0.326	0.382	0.275	1,295	-0.056	-264	1,534
7.도매 및 소매업	1,500	0.010	0.041	-0.066	-930	-0.030	-424	147
8.운수업	390	0.244	0.125	0.018	65	0.120	437	892
9.숙박 및 음식점업	1,196	-0.017	0.029	-0.078	-872	-0.046	-513	-189
10.출판영상 등	106	0.031	0.129	0.022	22	-0.098	-97	31
11.금융 및 보험업	350	0.122	0.107	0.000	1	0.015	51	401
12.부동산업 및 임대업	111	0.243	0.032	-0.075	-78	0.211	218	251
13.전문, 과학 등	112	0.087	0.257	0.151	159	-0.170	-179	92
14.사업시설관리 등	112	0.797	0.258	0.151	158	0.539	563	833
15.공공행정, 국방 등	704	0.178	0.185	0.078	512	-0.006	-41	1,175
16.교육서비스업	830	0.075	0.099	-0.008	-59	-0.025	-191	580
17.보건업 및 사회복지	543	0.483	0.345	0.238	1,210	0.139	705	2,458
18.예술, 스포츠 등	118	0.211	0.061	-0.046	-51	0.150	167	234
19.협회·단체, 개인서비스업 등	648	0.012	0.067	-0.039	-239	-0.056	-337	72
계	9,370	0.105	0.107	-0.008	-681	0.006	523	9,213

5개 군 지역에서 지역산업효과와 지역경쟁요소가 모두 부적효과를 보이는 부문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협회・단체, 개인서비스업 등] 7개 부문으로 이들 업종은 다른 부문보다 빠른 고용감소가 예상 된다. 이중 지역 내 산업효과보다 지역경쟁요인이 약한 부문은 [농업, 임업 및 어업], [교육 서비스업], [협회·단체, 개인서비스업 등] 3개 부문으로 동 산업과 관련한 지역 내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을 우선적으로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광업], [전기·가스 등],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4개 부문은 산업구조 요인에 의한 감소가 더 큰 부문으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5개 군 지역주민에게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축소로 볼 수 있어 인구감소에 의해 해당 업종축소가 반복되는 순환구조로 5개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5개 군의 사업체 수 증감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6>인데, 고용시장은 실물시장에서 파생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사업체수 변동이 미래시점의 고용자 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5개 군 지역의 산업부문별 고용자수 변화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 사업체 수는 2007년에 비해 119개가 증가하였다. 사업체 수 증가에 미친 효과는 국가성장에 의한 효과가 2.8%, 산업구조효과 0%, 지역경쟁요인은 -0.6%로 고용효과와 동일하게 국가성장에 의해 5개 군의 사업체 수가 좌우되고 있어 지역 내 위치한 사업체가 내부수요를 충족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무엇보다 고용에 미친 산업구조 효과는 -0.8%인데, 사업체에 미친 효과는 0.0%, 지역경쟁요인은 각 0.6%, -0.6%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산업구조 요인에 의한 고용자수 변화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지역경쟁요인에 의해 사업체수가 감소하고 이는 다시 고용자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내부요인에 의해 향후 5개 군 지역의 고용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에 비해 2010년 현재 순 증가한 부문은 [하수폐기물 처리 등],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등], [사업시설관리 등], [보건업 및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등], [협회・단체, 개인서비스업 등] 10개 부문이다. 이 중 산업구조 요인과 지역경쟁요인 모두 양적효과를 보여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부문은 [하수폐기물 처리 등], [건설업], [사업시설관리 등]의 3개 부문이다.

Table 6 산업부문별 사업체수 변화

경제활동별	국가성장 효과	지역 성장	국가 성장	산업구조 요인	산업구조 효과	지역경쟁 요인	지역경 쟁효과	전체
1.농업, 임업 및 어업	3	-0.047	0.040	0.012	1	-0.087	-9	-5
2.광업	1	-0.429	-0.004	-0.033	-1	-0.424	-9	-9
3.제조업	58	-0.038	-0.017	-0.046	-93	-0.021	-43	-78
4.전기, 가스 등	1	-0.136	-0.043	-0.071	-2	-0.094	-2	-3
5.하수폐기물 처리 등	2	0.158	0.089	0.060	3	0.069	4	9
6.건설업	21	0.054	0.032	0.003	3	0.022	17	41
7.도매 및 소매업	193	-0.017	0.010	-0.018	-124	-0.027	-187	-117
8.운수업	52	0.027	0.025	-0.004	-7	0.002	4	49
9.숙박 및 음식점업	141	-0.010	0.018	-0.010	-50	-0.028	-140	-49
10.출판영상 등	3	-0.009	0.080	0.051	6	-0.089	-10	-1
11.금융 및 보험업	8	0.055	0.063	0.035	10	-0.008	-2	16
12.부동산업 및 임대업	14	0.180	0.014	-0.014	-7	0.166	83	90
13.전문, 과학 등	8	0.086	0.106	0.078	21	-0.020	-5	23
14.사업시설관리 등	5	0.220	0.191	0.163	26	0.029	5	35
15.공공행정, 국방 등	8	-0.158	-0.029	-0.057	-16	-0.129	-35	-43
16.교육서비스업	27	-0.016	0.067	0.039	37	-0.083	-79	-15
17.보건업 및 사회복지	18	0.195	0.214	0.185	116	-0.018	-12	122
18.예술, 스포츠 등	14	0.073	0.020	-0.009	-4	0.054	26	35
19.협회·단체, 개인서비스업 등	92	0.006	0.046	0.018	58	-0.040	-131	19
계	666	0.022	0.028	0.000	-21	-0.006	-526	119

Table 7 조직형태별 사업체 및 고용인력 수 변화

순위	경제활동	조직형태 (2010년 기준)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개	%	명	%	개	%	명	%	개	%	명	%	개	%	명	%
1	17.보건업 및 사회복지	408	16.6	3,178	43.7	4	-	73	-	243	2.1	3,237	21.6	92	148.6	1,057	396.2
2	6.건설업	362	3.4	946	-4.5	436	7.7	5,285	42.8	1	-66.7	11	-26.7	0	-	0	-
3	3.제조업	1,481	-9.9	4,581	0.0	411	21.2	12,763	10.7	58	18.4	783	0.4	4	-	36	-
4	15.공공행정 및 국방 등	0	-	0	-	0	-	0	-	229	-15.8	7,762	17.8	0	-	0	-
5	5.운수업	1,743	1.9	2,263	10.5	97	24.3	2,054	48.1	28	-12.5	218	5.3	3	50.0	6	-14.3
전체		3,994	-1.5	10,968	11.6	948	15.3	20,175	21.4	559	-5.9	12,011	3.6	99	153.8	1,099	399.6

지역경쟁요인에 의해 사업체 수가 증가한 부문은 [하수폐기물 처리 등], [건설업], [운수업], [사업시설관리 등], [예술, 스포츠 등]인데, [하수폐기물 처리 등]은 오염 및 폐기물과 관련되는 산업으로 도시지역 기피산업이며, [건설업]은 고용부문 효과가 전국보다 -0.056이 작은 반면, 사업체 수 증가는 0.022가 높다. 이러한 결과를 <Table-4>를 토대로 살펴보면 2010년 현재 전국의 1/2 정도에 불과한 7.8명에 불과한 소규모 업체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런데 고용측면과 같이 사업체 수에서도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은 모든 효과에서 부적 효과를 보이는데 지역경쟁 효과가 산업구조 효과보다 높으나 5개 군 인구감소 등의 영향과 함께 노령화 등에 의

한 내부수요 감소에 의해 동 업종이 지속될 수 있는 경영환경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종합적으로 분석된 결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5개 군 지역에서 공공부문 성장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Table-7>의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분석하였다. <Table-7>은 <Table-5>의 고용자 수 변화 부문 중 2007년-2010년 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산업부문 중 5개 부문을 제시한 결과인데, 전체 고용자수는 회사법인 20,175명, 회사이외법인 12,011명, 개인사업체 10,968명이며 2007년 대비 각 부문 고용성장은 각각 21.4%, 3.6%, 11.6%로 회사법인과 개인사업체가 고용을 증가시킨 주요한 원인이나,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의 경우 2010년 현재 총 사업체 수 747개, 총 고용자 수는 7,472명인데, 개인사업체 종사자 수는 2007년에 비해 43.7%, 회사이외법인 21.6%, 비법인단체 396.2%로 비법인단체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나, 동기간 회사이외법인에 속한 고용자수는 3,237명으로 가장 많고 [공공행정 및 국방 등] 부문은 2007년에 비해 17.8%가 성장한 7,762명으로 5개 군에서 공공부문이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및 제언

농촌정책의 주요한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이나, 대부분의 연구는 농업, 농업인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는 지역 내에 위치한 다양한 산업이 지역 내 외부 변화에 종합적으로 반응하는 결과로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용측면에서 지역 내에 위치한 다양한 산업부문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충청남도 5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고용 및 사업체 수 변화를 변이할당 분석을 통해 성장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농림어업이 5개 지역에서 기반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지역 내 총생산액과 농가 수, 농가인구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각각 23.58%, 13.6%, 34.2%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대비 농가 수와 농가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비중을 토대로 볼 때 농림어업이 5개 군 지역에서 기반산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사업체별 종사인력 규모를 살펴본 결과 광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5개 군 지역의 규모가 작았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 고용인력 및 사업체 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국가성장요인, 산업구조요인, 지역경쟁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5개 군 모두에서 고용성장을 이끄는 대부분 효과는 98.1%가 국가성장에 기인하고 있었으며, 내부요인인 산업구조요인의 효과는 －0.008, 지역경쟁효과는0.006으로 5개 군 내에 위치한 산업이 전국성장을 견인하면서 내부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는 산업이 약한 것으로 보이며, 종합적인 수준에서 볼 때 지역 내 산업을 고도화시키면서 산업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순환적인 산업구조를 양성함으로써 외부수요에 좌우되지 않는 자립적인 산업기반 조성이 필요함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쟁효과는 다소 양호하나 제조업 부문을 제외한 고용효과 증가는 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 [사업시설관리 등], [운수업] 등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은 주로 병원과 복지서비스업 전달을 위한 영역으로서 노령화된 농촌인구의 동 부문에 대한 수요에 기초한 성장으로 보이며, [사업시설관리 등]의 부문이 주로 도서관, 사적지 등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영역에 기초하고 있어, 이들 영역의 공공부문의 고용효과가 증가한 효과로 5개 군의 고용구조에 점차로 공공부문의 영향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업체성장에 영향을 준 요인을 살펴보면 지역경쟁요인 －0.006, 산업구조요인 0으로 고용부문과 같이 국가성장이 사업체 변화에 78.6%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런데 산업구조 요인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이 큰 폭으로 사업체 수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지역경쟁 요인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 스포츠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 요인과 지역경쟁요인 모두 양적효과를 보이면서 성장하는 부문은 [하수폐기물 처리 등], [건설업], [사업시설관리 등]의 영역으로 주로 폐기물 처리 등 도시지역 내 기피시설이 입지하며, 사적지 관리 등의 공공시설물의 관리적 측면에서 사업체 수가 성장하고 있었다.

고용과 사업체 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도매 및 소매업]은 고용자 수는 147명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국가성장에 의한 효과로서 산업구조효과와 지역경쟁효과는 각 1,354명, 1,385명씩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사업체 수에서도 동 부문은 전체적으로 각 117개, 49개가 감소되고 있는데, 지역 내부효과에 의해 각 311개, 190개가 감소하여 국가성장에 의해 유지되고 있을 뿐 사업체 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고용감소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결과가 국내 농촌지역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면 우선 5개 군의 지역고용 및 사업체 성장원인 중 국가성장에 의한 효과는 각 98.6%, 78.6%로

지역 내생적 원인보다 외생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현실로 대다수 농촌지역 고용 및 사업체수 성장효과가 지역외부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로 보여 외부의존적인 농촌지역 경제를 지역 내부주민 수요에 기초한 산업으로 특화시켜 지역내부 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도매 및 소매업] 등과 같이 농촌주민에게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감소는 향후 농촌주민의 기초생활을 위한 각종 생활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결과로 이들을 포함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향이 읍면소재지 개발사업 등의 사업기능과 내용에 포함시켜 지원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경남고용포럼, 2007, 경남지역 노동시장정보(LMI) 확충방안.
2. 고성보, 2008, 제주지역 농가부채의 구조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4(2), 85-97.
3. 국토연구원, 1999,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 국토계획 및 동북아 분야, 안양: 국토연구원.
4. 권오옥, 김천성, 2012, 농촌 어메티니 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성공요인과 시사점, 농업경제연구, 53(3), 472-496.
5. 김배근, 2012, 기술혁신은 고용 없는 성장을 야기하는가?, 경제학연구, 60(3), 5-54.
6. 김상태, 유광민, 김남조, 2012, 국립공원 생태관광체험프로그램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관광연구논총, 24(2), 97-117.
7. 김상호, 2000, 전북 지역성장의 구조적 분석(1985~1996) : 입지상과 변이·할당분석의 적용, 자치행정연구, 1: 101-115.
8. 김영주, 星野敏, 손은일, 201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추진모형 연구, 농촌계획, 18(3) : 1-11.
9. 김영택, 이상창, 강은지, 김용근, 2011,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활성화 계획 : 가평군 운악산 포도향 권역을 대상으로, 농촌계획, 17(3), 113-124.
10. 김태이, 임정빈, 안동환, 2012, 공적보조금이 지역내 지역간 농가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농업경제연구, 53(1), 41-61.
11. 김학훈, 2011, 청주의 고용성장과 산업변화: 1985-2005, 변이할당모형에 의한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3): 325-341.
12. 김홍배, 김현주, 2001, 예측수단으로서의 변이할당모형, 국토계획, 36(1) : 221-230.
13. 김홍식, 김태경, 이수진, 이봉구, 이인재, 2009, 경기도 의료관광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4. 문지효, 송운강, 2012, 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메가스포츠 이벤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2010 춘천 월드레저총회 및 경대대회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6(3): 5-20.
15. 민홍기, 2009, 공간체계 변화에 따른 어촌지역사회 전망, 농어촌과 환경, 103, 30-51.
16. 박광서, 1979, 한국농촌의 저수준고용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3: 125-143.
17. 박영구, 이승렬, 2006, 한국 농촌지역의 고용기회요인과 정책시사점, 한국정책학회보, 15(4): 87-110.
18. 박이택, 2012,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광역권 인구이동 : 변이-할당분석으로부터의 접근, 55(2), 168-200.
19. 박진욱, 엄붕훈, 2012,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 청도군 남성현 감꽃권역을 대상으로, 농촌계획, 18(3): 287-200.
20. 변상규, 2012, 부산국제광고제의 성과와 발전방안 : 지역산업연관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4(1): 218-243.
21. 변필성, 김광익, 김태환, 2005, 지역 경쟁력과 경제발전 간의 관계: 변이할당분석기법의 고용성장에의 적용을 토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2): 267-284.
22. 서성원, 박용린, 빈기범, 2012, 변이할당기법을 이용한 전국 관광·레저산업의 지역적 비교우위 분석, 관광·레저연구, 24(3) : 161-184.
23. 우재영, 2012, 지역경제 활성화요인으로 새로운 장소마케팅 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39-563.
24. 유영명, 김형빈, 2012, 부산지역 고용구조 변동과 업종별 고용창출능력 분석, 지방정부연구, 16(1): 89-102.
25. 유형명, 이정훈, 주수현, 2011, 전국산업단지와 비교한 녹산산업단지의 경쟁력 분석, 지방정부연구, 15(3), 55-74.
26. 이광원, 1978, 임업투자가 산촌의 소득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 전북지방 임업투자를 중심으로, 농촌경제, 1(3): 142-149.
27. 이동소, 김관수, 안동환, 2012, 체제전환국 농업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4(2), 169-177.
28. 이민진, 1985, 한국농촌노동력의 고용형태의 변화 : 도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사례연구, 연세사회학, 6: 188-221.
29. 이상학, 김정숙, 2010,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

입의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 2003~2007, 한국경제연구, 28(3), 93-115.
30. 이순배, 이현우, 2011, 기초생활권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과분석 : 소득발생과 고용창출의 관점에서, 재정정책논집, 13(1): 81-112.
31. 이성우, 임형백, 조중구a, 2003, 도시와 농촌의 고용기회 결정요인 1995~2000, 농촌경제, 26(1): 1-24.
32. 이성우, 임형백, 고금석b, 2003, 기회편익으로 측정한 도농간 이동자의 고용기회, 한국지역학회, 19(1): 1-26.
33. 이정록, 2000, 광양만권의 공업화와 지역경제의 변화 : 1987~1996, 국토계획, 35(2), 175-186.
34. 이정석, 2012, 국제교류에 의한 지역활성화 방안 : 경상남도와 대한해협 연안 현간 사례연구, 24(1): 235-259.
35. 이호근, 2011, 유연근무법제 현황과 여성고용정책 성공의 조건, 한국사회정책, 18(2): 101-141.
36. 이홍, 안병진, 2012,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기초조형학연구, 13(2): 421-429.
37. 정순관, 2006, 지역산업발전의 영향요인분석과 지방정부의 대응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2) : 129~150.
38. 조은정, 최수명, 김한얼, 2011, 전통식품산업 지식기반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영광 모싯잎 송편산업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17(1), 89-98.
39. 주상현, 최낙관, 김근식, 2006, 지방정부 노인복지욕구 실태와 정책과제, 지방정부연구, 10(4): 195-220.
40. 정철영, 1996, 농어촌 근로청소년의 교육훈련 및 고용실태와 대책, 농촌사회, 6: 87-121.
41. 최재용, 2012, 지역산업의 경쟁력과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강동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2(3), 323-344.
42. 최창호, 2012, 여수 엑스포와 지역경제, 도시문제, 47(522): 14-19.
43. 통계청, 2012, 2012년 농가 및 어가경제 조사결과, 대전 : 통계청
44. 통계청 보도자료, 2012년 4월 30일자. 2012년 농가 및 어가경제 조사결과.
45. 통계청a, 2010,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농가 전·겸업별 농가에서 발췌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46. 통계청b 2012, 나라지표 농업일반에서 발췌 (http://www.index.go.kr).
47. 통계청c 2010, 2010년 총조사인구 총괄에서 발췌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48. 홍정화, 2012,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육아휴직정책에 관한 법적검토와 개선방향 제안, 한국법정책학회보, 12(3): 1141-1175.
49. Curtis. W. C.. 1972. Shift-Share Analysis as a Technique in Rural Development Research, Am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54, No.2, 267-270.
50. Halperin. S. B. & Mabry. R. H.. 1984.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Lines Comparson : A Shift-Share Analysi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51, No. 3, . 524-535.

접 수 일: (2013년 1월 2일)
수 정 일: (1차: 2013년 2월 6일, 2차: 3월 15일
3차: 3월 18일, 4차: 3월 22일)
게재확정일: (2013년 3월 22일)
■ 3인 익명 심사필